

일본의 TPP 교섭 동향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1 | TPP 개요 및 목적

□ 환태평양 12개국에 참여,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FTA

※ 협상 참여국 확대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06)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08) → 말레이시아('10) → 일본, 멕시코, 캐나다('11 협상참여)

- TPP는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며, 기존 협상참여국 전체의 동의(Consensus)로 신규참여국 승인
- 외교면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일·중 FTA, ASEAN+3 추진 등의 대항수단 성격
 - 일본도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ASEAN+6를 추진하였으나 교섭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미·일 주도의 최대규모 경제권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수단 확보

- TPP는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APEC)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목표로하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위협요소에 대응하고, WTO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중국 및 신흥국을 편입
 - 특히 일본은 인구고령화, 국내시장 축소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일본의 TPP 주요 동향(연도별)

- (2010년) APEC회담에서 교섭참가 착수를 정식 발표(11.13)
- (2011년) 일본 경단련측에서 TPP교섭 조기참가를 요청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은 1,100만명이 넘는 TPP반대서명을 정부에 제출(10.11) 했으며, 경단련과 JA전중 회담 결렬(11.9)
 - '10.10월부터 '11.9월말까지 1년간, 42개 지자체에서 TPP참가에 대해 반대론, 신중론 등의 의견서가 채택
 - 민주당의 경제연계 프로젝트 팀은 정부에 TPP참가에 신중할 것을 제언, 당시 수상(노다)은 호놀룰루 APEC수뇌회담에서 TPP교섭참가를 위해 관계국 협의를 표명
- (2013년) 아베수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는 성역없는 관세철폐'가 전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TPP참가를 표명(3.15)
 - 일본 정부 TPP 정부대책본부 설치(3.22)
- (2014년) 실질적으로 TPP를 주도하는 미·일간 협상이 중요품목에 대한 이견차이로 지연되어 왔으나, 4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진했던 TPP관련 교섭 가속화하기로 합의
 - 일본은 농산물 관련 중점 5품목(쌀, 밀, 소고기·돈육, 우유 및 유제품, 감미자원작물), 미국 자동차 관련 입장차 확인
- (2015년)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농협개혁안을 수용함(2.9)에 따라 일본 국내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아베수상이 빠르면 4월말 미국을 방문하여 TPP협상을 마무리할 예정

□ TPP 교섭의 주요 쟁점

<미·일 교섭>

항 목	일본 입장	미국 입장
소고기·돈육 *관세: 牛341엔, 돈육482엔/1kg	강력한 세이프가드 도입 조건으로 소고기 10%이하, 돈육 50엔이하로의 관세 인하 검토	관세철폐를 고집하는 돈육업계 등의 압력을 배경으로 큰폭의 자유화 요구
유제품	저율 또는 무관세 수입할당 활용을 축으로 영향이 적은 일부품목의 관세철폐도 검토	치즈, 버터, 탈지분유, 유청의 관세철폐 또는 큰폭의 인하요구
쌀·밀	MMA, 국가무역등의 현행제도 범위내에서 운영개선 등 검토 (최대 연 5만톤)	관세유지 용인 주식용 쌀의 수출확대 겨냥
사탕 등	미일 모두 관세유지	미일 모두 관세유지
자동차부품	관세의 즉각 철폐	

<미국·신흥국 교섭>

항 목	미국 입장	신흥국 입장
지적재산권 보호	신약 데이터의 보호기간을 길게(바이오 의약품은 12년)	후발 의약품 보급을 위해 보호기간은 3~5년 정도
국유기업의 보호정책	민간기업과 동일한 취급	국유기업이 국내생산을 지탱하고 있어 보호정책 유지

□ TPP 21개분야의 진행현황

* ◎ 합의완료, ○ 합의접근, △ 진전, × 난항

분야	교섭내용	현황
상품시장 액세스	농산물·가공식품의 관세철폐·삭감	△
원산지 규칙	관세철폐 대상품목의 지역내 원료사용 비율	△
무역원활화	세관 절차 간소화 및 무역규칙의 투명화	○
위생식품검역	식품 안전확보 및 방역조치	○
무역의 기술적 장애	공산품 등의 규격 통일화	○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의 Rule	○
정부조달	정부조달상의 외국제품 차별금지	○
지적재산	신약 데이터 보호강화 및 저작권 기간 연장	×
경쟁정책	국유기업 우대조치의 제한	△
월경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
일시적 입국	비즈니스맨의 이비국, 일시체제 조건 완화	○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
전기통신	전기통신분야의 규제완화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확를 위한 규칙 정비	○
투자	정부와 진출기업등 간의 분쟁해결 절차	△
환경	수출확대를 위한 환경기준 완화 금지	△
노동	수출확대를 위한 노동기준 완화 금지	○
제도적 사항	협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책	△
분쟁해결	가맹국간의 분쟁해결 절차	△
협력	개도국 체제정비 및 인재육성의 지원	◎
분야횡단적사항	중소기업지원책 및 규제에 대한 자의적 변경금지	◎

주) TPP 정상회담에 제출된 보고서 및 관계자 취재에 시사통신 자료

품목	생산감소액	시나리오
쌀	197백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쌀 가격은 국산의 1/4정도로 품질격차, 품종전환등에 의해 해소가능 · 미국의 수출량은 약 400톤으로, 아시아국가 수출량을 포함하면 국내생산량을 넘음 · 국산쌀의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교체되며 일부 특화쌀(유기쌀) 등 차별화가능 쌀만 남게됨
밀 (보리)	8백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 밀의 가격은 국산의 1/2정도로 원료용 밀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국내제분 코스트와 거의 같음 · 현재는 밀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제분되나, 향후 밀가루로 수입됨 · 국산100%를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차별화가능 밀가루(생산량의 약 1%)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밀가루로 대체. 특히 수입밀에서 징수하고 있는 마크업(약 800억엔) 상실
감미자 원작물	15백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 정제당의 가격은 국산정제당의 1/3정도로 원료당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국내의 정제코스트를 하회하는 수준 · 현재 조당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나, 제정당으로 수입되게 됨 · 설탕은 수입산과의 품질차가 없어 모두 수입산으로 대체 · 수입당 등에서 징수되고 있는 조정금(약500억엔)도 상실
우유 조제품	45백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터, 달지분유, 치즈등의 제조품은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품질격차가 없어 국내산은 모두 수입산으로 대체 · 수입유제품의 급증에의해 판로를 잃은 홋카이도산 유제품은 우유용으로 공급되고, 생유생산은 프리미엄급을 제외하고 소멸 · 일반 우유는 운송기술발달에 의해 수입이 가능해져 가격도 국산의 1/2정도이므로 국산의 20%정도가 대체됨
소고기	45백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산 가격은 국산의 1/3정도. 육질3등급이하의 국산육이 외국산 소고기로 대체되고 육질 4,5등급 국산소고기만 남음 · 수입소고기로부터 징수하는 소고기관세(약 700억엔) 상실

※ 자료 출처 : 일본농림수산성(2010.10.27.)